

현안보고

대외비

통일외교사회정책실

부연구위원 장경수

‘구직촉진수당’ 확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
2026년 7월 13일

구직촉진수당 확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
2026. 7. 13.(월) 통일외교사회정책실 장 경 수

- 정부는 취업이력 요건을 완화·삭제해 구직촉진수당 대상 확대 및 제도 상시화 추진
 - 재정소요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없이 대상 확대부터 발표하는 절차적 문제 발생
 - 훈련·채용 연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무책임한 현금성 복지 확대에 그쳐 근로유인을 저해할 위험
- 구직촉진수당 확대의 핵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
 - ① 대상 급증으로 인한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 → 재정소요 추계 선공개 원칙
 - ② 근로유인 저해(도덕적 해이) → 근로연계형 조건부 지급구조 도입
 - ③ 훈련·채용 연계 실효성 부재 →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 선행
 - ④ 기존 제도 운영의 부실 방지 →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
 - ⑤ 전면 도입에 따른 형평성 논란 → 시범 운영 및 단계적 확대 방식 채택

1. 연구 배경 및 목적

- 정부는 '쉬었음 청년'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(요건심사형·선발형)의 핵심 지급요건인 취업이력(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) 요건을 완화 또는 삭제하고, 구직촉진수당 제도 자체를 상시화하는 방안 추진
 - 2026년 추경을 통해 'K-청년보장' 트랙에 786억원을 투입, 3만 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선제 지급
 - ※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20·30대 '쉬었음 청년'은 64만 8천 명으로 10년 전 대비 24만 명 증가

[표 1] 현행 구직촉진수당 제도(I 유형) 개요

구분	내용
법적 근거	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(2021.1. 시행)
대상(I 유형)	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(청년 5억 원 이하),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이상
지급 수준	월 60만 원(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가산, 최대 40만 원) × 6개월, 최대 1년 연장 가능
지급 조건	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 및 구직활동의무 이행시에만 지급
2026.7. 확대 방향	취업이력 요건 완화·삭제 + 제도 상시화 추진(기재부 예산협의 단계)

- 그러나 재정소요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상 확대부터 발표하는 절차적 문제 존재
 - 훈련·채용 연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현금성 복지 확대에 그쳐 근로유인을 저해할 위험 다분
-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의 구직촉진수당 확대시 예상되는 재정·근로유인·형평성 측면의 핵심 문제점을 분석하고, OECD 주요국의 유사 제도 개혁 흐름과 비교하여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
2. 구직촉진수당 확대의 문제점

① 재정 지속가능성

- 대상 확대 방침을 먼저 발표하고 재원조달 방안은 추후 기재부 협의로 미루는 선(先)발표·후(後)설계 방식으로 추진
- 수급자 급증 시 재정 부담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

② 근로유인 저해(도덕적 해이)

- 취업경험 요건 삭제 시 노동시장 진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까지 수당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 유인 없이 수당에만 의존하는 사례 확산 우려
- 이미 온라인상 부정수급·편법수급 조장 정보가 유통 중

③ 훈련·채용 연계 실효성 부재

- 정부는 직업심리검사·자격훈련·인턴십 연계를 표방하나, 현장(인력사무소·훈련기관)에서는 프로그램의 질과 공급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비판 제기

④ 기존 제도 운영의 부실 방치

- 2단계 직업훈련 교육기관의 부실 운영·형식적 평가·수강생 갑질 등 기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만 확대할 경우 문제가 배가 될 위험

⑤ 형평성 논란

- 기존에 엄격한 취업이력 요건을 충족해 지원받은 수급자와 요건 없이 새로 진입하는 무경험 청년층 간 형평성 문제 발생

3. OECD 주요국의 제도 비교

- OECD 주요 국가는 최근 실업부조·구직수당 제도에서 오히려 '권리'보다 '요건'을 강조하는 방향
 - 즉 **자격심사와 근로조건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선회**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요건 완화 방침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룸

[표 2] OECD 주요국 제도 비교

국가	제도	최근 개혁 방향
독일	뵘어겔트 (기초생활보장)	- 2026년 개혁 패키지에서 '자동 지급'보다 '요건 충족' 강조 기조로 전환 - 복지수당 부정수급 근절 행동계획 추진 - 실업급여·재취업지원 전반에서 구직활동 증빙·서류 제출 요건 강화
프랑스	RSA (적극적연대소득)	- 2025.1.부터 전체 수급자가 프랑스 일자리센터(France Travail)에 자동 등록되며, 주 15시간 이상 구직·근로·훈련 활동을 의무화 - 미이행 시 수당 제재. 시범사업 결과 수급자의 54%가 취업했으나 의무시간 설정을 둘러싼 논쟁 지속
영국	유니버설 크레딧(UC)	- 구직의무가 면제된 30세 미만 청년 수급자가 66만 2천 명에 달하고 1년 새 전체 수급자가 100만 명 급증하자 사회적 경고음 발생 - 토니블레어연구소 등은 '과도한 면제가 장기 복지 의존을 조장한다'고 비판, 제도 개편 압력 고조

- 독일·프랑스는 수당 지급의 전제로 구직·훈련 활동 의무화를 강화하는 반면, 우리 정부는 반대로 진입 요건(취업이력)을 완화하는 역행적 방향으로 가고 있음
- 영국의 사례는 요건 면제 확대가 어떻게 장기적 복지 의존과 재정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한국의 요건 완화 추진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위험을 내포
- 프랑스의 주15시간 의무화 모델은 '무조건 현금지급'이 아닌 '활동의무를 조건으로 한 지원'이라는 점에서 우리 제도 개선의 참고 모델로 활용 가능

4. 개선방안

① 재정소요 추계 선공개 원칙

- 취업이력 요건 완화·삭제 전 예상 수급자 규모 및 5개년 재정소요 추계를 국회에 선(先)보고
-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한 이후 시행 여부 결정

② 근로연계형 조건부 지급구조 도입

- 프랑스 RSA 모델을 참고해 주 15시간 내외의 구직활동·훈련·인턴십 참여를 지급 전제조건으로 명문화
- 취업경험 요건을 완전히 삭제하기보다 직업훈련 이수·자격증 취득 등 '대체 요건'으로 전환하여 근로 유인 유지

③ 훈련·채용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 선행

- 기존 2단계 직업훈련 교육기관의 부실 운영·형식적 평가 문제부터 감사·개선한 뒤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순서로 전환
- 훈련기관 평가에 실제 취업 성공률·수강생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반영

④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

- AI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취업이력 요건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 유인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별도 점검체계 마련
- 지급 중단·수급권 소멸 기준의 실효적 집행 여부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점검

⑤ 단계적·시범적 확대 방식 채택

- 전면 영구화 이전에 일부 지역·연령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유인 저해 효과와 훈련연계 성과를 검증
- 시범사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이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적 안전장치 마련